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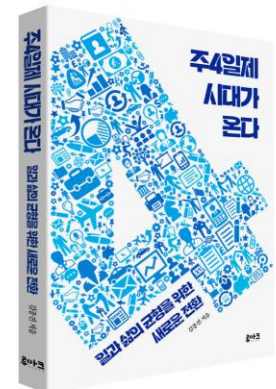
복합위기 시대

21대 대선 이후 노동정책, 지방정부 과제 모색

김 종 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22대 국회 불평등, 사회적 대화 자문위원





"30분 내 나가라" ...수습직원 대거 해고 '대혼란'

입력2025.02.14 16:54 | 수정2025.02.14 16:54

☆ ↗ 8 😊 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기관 수습 직원부터 대거 해고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과

이날(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과

트럼프즘 Trumpism

- 미국 자국우선(America First) 보호무역주의
- 반이민 정책 & 혐오 극단화
- 깡패 정치 : 파나마운하, 그린란드
- 국제기구 탈퇴 : UN 인권위, WTO, WHO, WFP, 파리기후협약 등
- 교육부 해체 :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프 플랜' 폐지

미국, 어떤 나라인가?

와스프 WASP
(백인, 앵글로색슨, 기독교)

- ✓ 2008년 버락 오바마 등장
- ✓ 백인의 위기
- ✓ 강경 보수 집단 '티 파티 등장'
United States of America Tea Party



반(反)인종차별 시위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백인 극우단체
프라이드 보이즈

Proud Boys



차별&혐오의 편향성 in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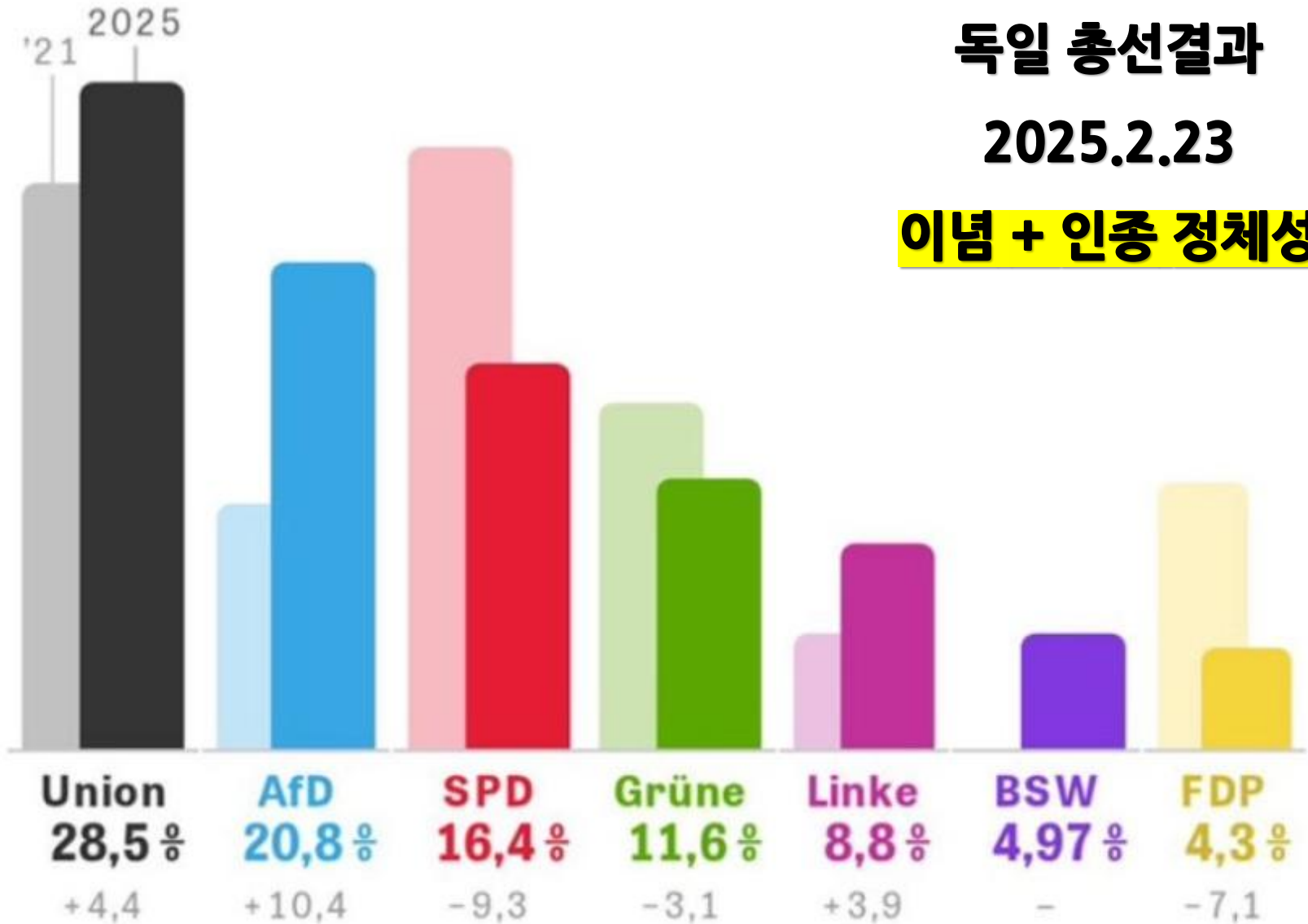
가짜 뉴스, 정체성 행동



독일 총선결과

2025.2.23

이념 + 인종 정체성



‘완전한’에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

Democracy Index 2024

	Overall score	Rank	Change in rank from previous year	I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II Functioning of government	III Political participation	IV Political culture	V Civil liberties
Spain	8.13	21=	2	9.58	7.50	7.22	7.50	8.82
Czech Republic	8.08	23=	3	9.58	6.43	7.78	7.50	9.12
Portugal	8.08	23=	8	9.58	7.14	6.11	8.75	8.82
Greece	8.07	25	-5	10.00	6.79	7.22	7.50	8.82
Flawed democracy								
France	7.99	26	-3	9.58	7.50	7.78	6.88	8.24
Malta	7.93	27	1	9.17	7.14	6.67	8.13	8.53
United States of America	7.85	28	1	9.17	6.43	8.89	6.25	8.53
Chile	7.83	29	-4	9.58	7.86	6.67	5.63	9.41
Slovenia	7.82	30	1	9.58	7.50	7.22	6.25	8.53
Israel	7.80	31	-1	9.58	7.50	9.44	6.88	5.59
South Korea	7.75	32	-10	9.58	7.50	7.22	5.63	8.82
Latvia	7.66	33	4	10.00	7.14	6.67	6.25	8.24
Belgium	7.64	34	2	9.58	8.21	5.00	6.88	8.53

* 출처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발표(2025년 2월27일)

韓 '결합 있는 민주주의'로... EIU 평가 10계단 하락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하면 '결합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했다. 영...
 EIU가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이 받은 세계 순위도 167개국 중 22위에서 32위로 내...
 국은 비상계엄 선포로 위기를 겪으면서 '완전...'
 점)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매겨진...
 의 성적표는 예사롭지 않다. 12·3 비상계엄...
 재에 따른 국내적 혼란과 갈등 격화, 국제 신...
 국민 모두가 깊이 체감하고 있는 터지만 느닷...
 리 민주주의가 입은 피해가 공신력 있는 기관...
 순위의 하락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한...
 판을 만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당장 그 추락이 다른 분야의 평가에도 나쁜 영...
 만큼 허투루 넘겨버릴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계엄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고...
 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판재 공방전과 법원...
 들어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들은 이번 EIU 평...
 았다.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
 벌어질지도 예측 불허다. EIU도 보고서에서 "윤...
 도에 따른 여파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
 을 고조시켰고 2025년에도 지속될 것 같다"고 전...
 그간 한국의 정치적 격동은 매년 세계의 호기...
 의 토픽감이었다. 얼마 뒤 현재 주변에서 벌어...
 세계는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명분도 요건도...
 은 이미 국민 가슴에 깊은...
 았다. 그 실책을 바로잡...
 갈등은 커졌지만 그것이...
 될지언정 더 큰 분열로...

민주주의

(民主主義, Democracy)

Demos(민중) + Cratos(지배)

직접&대의, 경제&사회

권력 소유형태 : 군주제 vs. 공화정

권력&사회이념 차이

- ✓ 봉건영주제 vs. 자본주의
- ✓ 파시.쇼비니즘 vs. 사회민주주의
- ✓ 전체주의 vs. 자유주의

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y)
결합 있는 민주주의 (Flawed democracy)
혼합된 체제 (Hybrid regime)
권위주의 (Authoritarian regime)

8-10점	60개 지표
6-8점	✓ 선거과정 ✓ 정부의 기능
4-6점	✓ 정치적 참여
0-4점	✓ 정치적 문화 ✓ 시민자유권리

[세상 읽기]나는 고발한다, 국민주권을 짓밟은 윤석열을

이럴 때 행사하자. 윤석열 '하야'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총파업에 지지를 보낸다. 곧 새해를 맞이한다. 하야나 탄핵 이후엔 무엇을 준비할지도 고민...

2024.12.05



[세상 읽기]극우 세력에 짓밟힌 '깨진 민주주의' 찾아오기

내란 세력이 극우와 연합한 풍경을 접하고 있다. 탄핵 이후 노동자, 시민이 주체가 되어 낡은 정치를 떨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와 ...

2025.02.27



아담 쉘보르스키(Adam Przeworski)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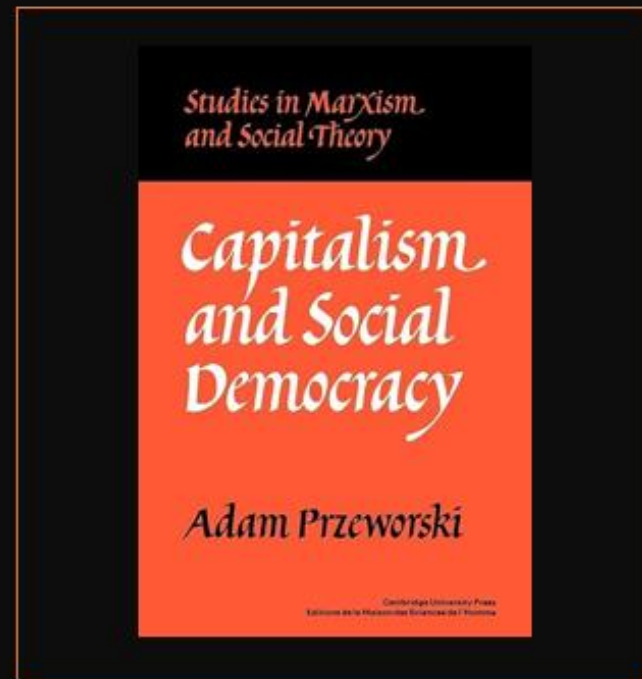
『선거와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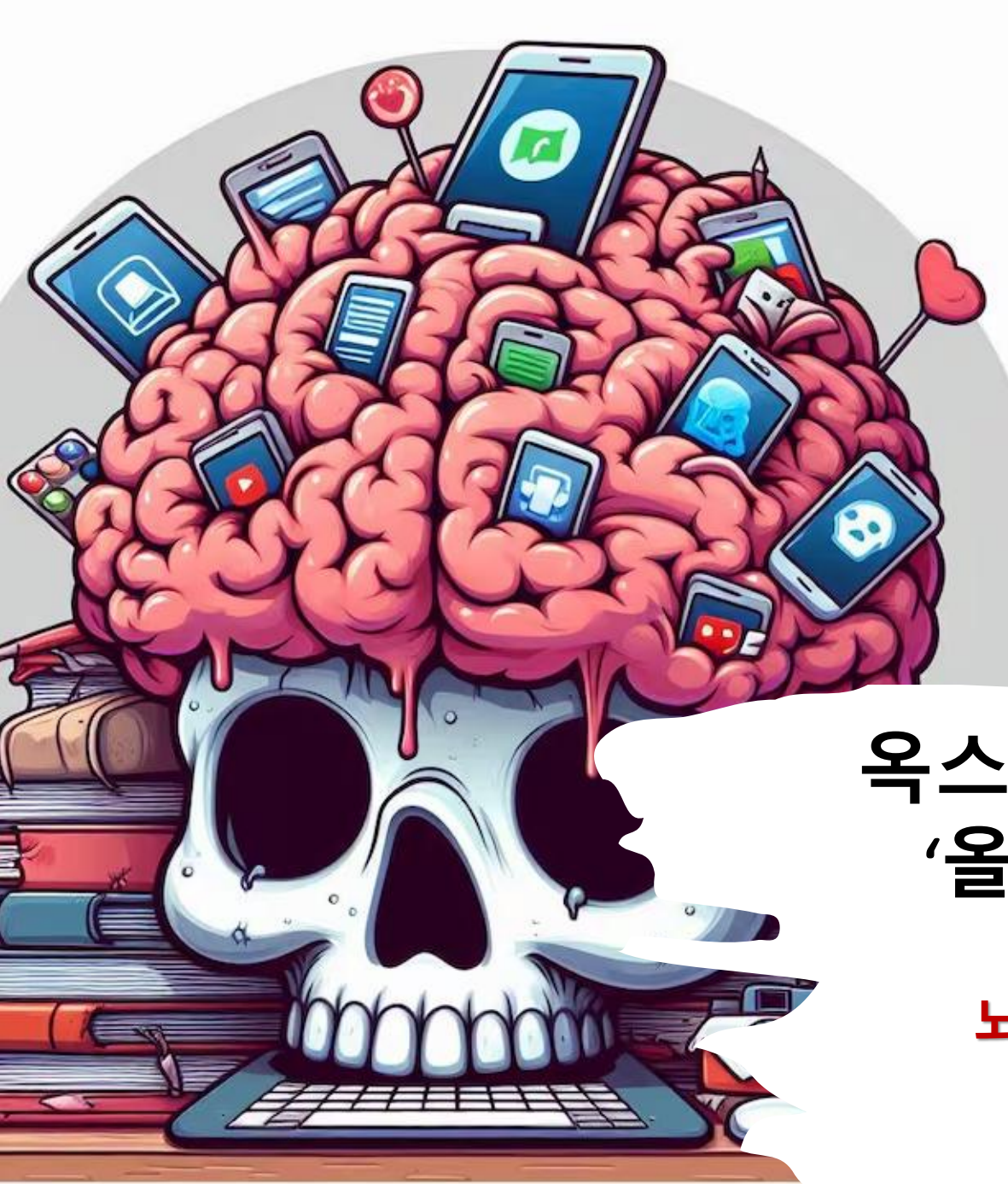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을 통한 지배’(rule through law)

민주주의 ‘불확실성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of uncertain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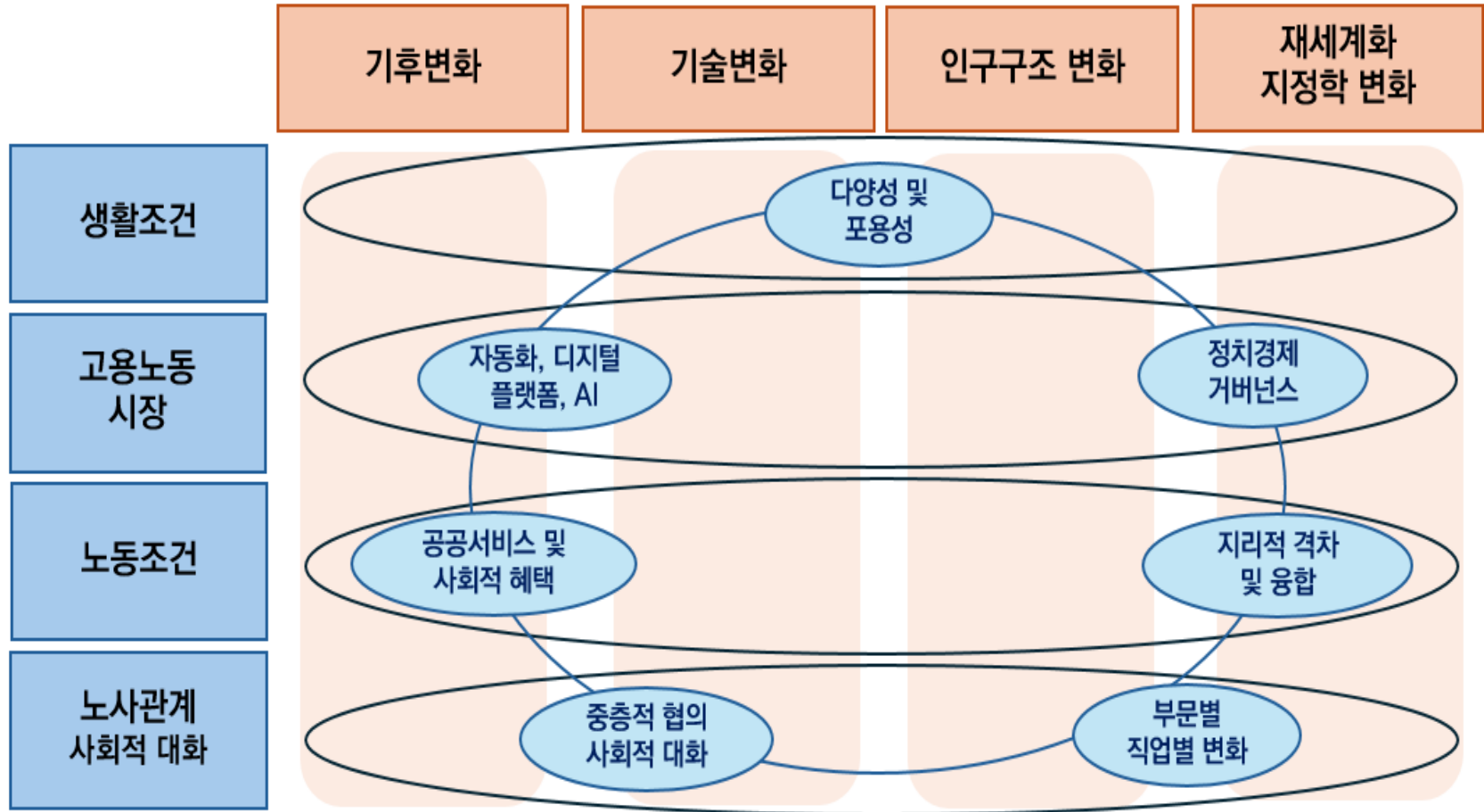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올해의 단어'(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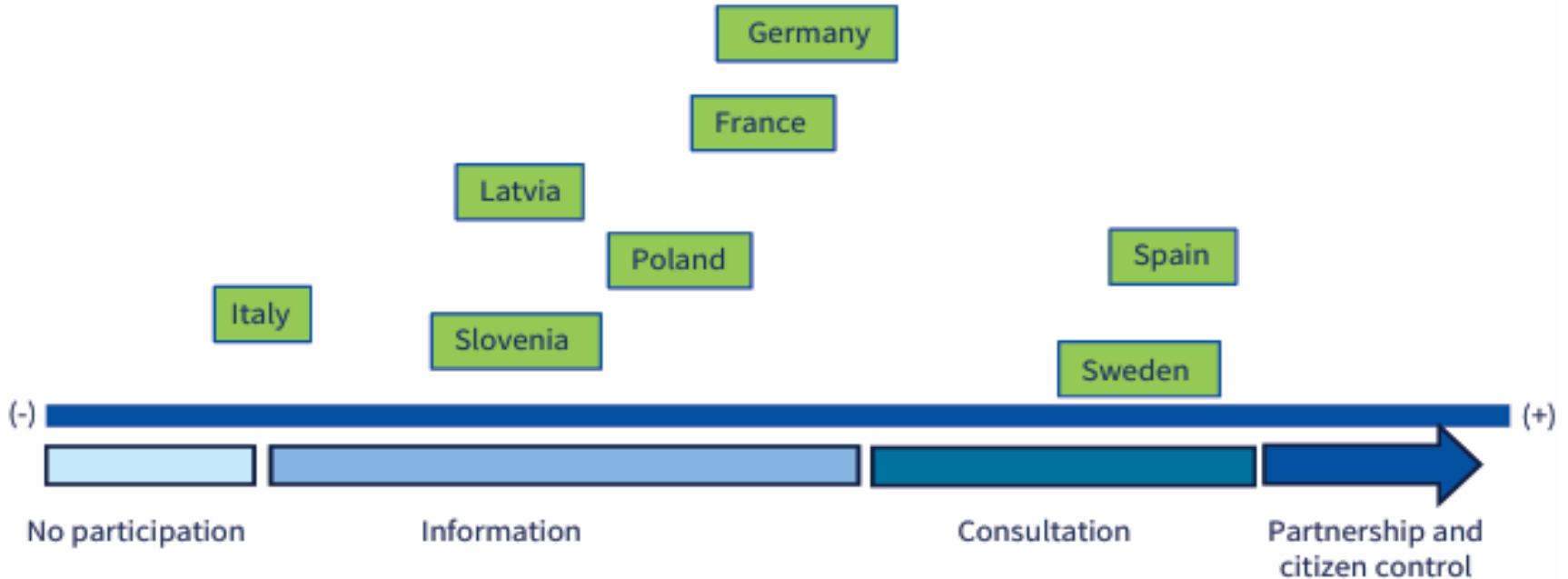
뇌 썩음, 부패 brain rot

글로벌 문제 - 복합위기 '국가, 지역, 산업 노동' 위험 요인



글로벌 문제 - 복합위기 '정의로운 전환'

EU 국가 정의로운 전환 과정 정책(TJTP)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 ✓ 지역 인프라 취약한 경제 취약국
- ✓ 노동 시장 위협, 일자리 손실 위험
- ✓ 복잡한 절차 및 관료주의, 역량 부족

- ✓ 조정 부족(정책 거버넌스)
- ✓ 이해관계의 불일치(시민 인식)
- ✓ 위협받는 역사와 문화

글로벌 문제 - 복합위기 '인구구조 변화 - 고령, 돌봄, 이주'

OECD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방향 (2023)

- ✓ 조기은퇴 유인 감소 노동공급 정책
- ✓ 고령 취업 일자리 증가 노동수요 정책
- ✓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 ✓ 교육·훈련 확대 노동생산성 정책



OECD(2023), 『Working Better with Age』 OECD.

OECD 고령자 정책 과제 (2023)

- 고령자 고용장려금: 연금 보너스&세제
- 고령 노동자자 고용 및 유지 - 고용주 장벽 해결(차별)
- 생애주기 접근 방식 - 고령자 고용 가능성 개선
- 공공부문 (지자체 등) - 일자리 노동시장 정책 변화

ILO 고령근로자 권고 제162호 (Older Workers Recommendation, 1980,

No. 162) 고용 및 직업에서 차별 등 고용정책권고안

<은퇴로 이행,
노동자 빈곤과 위험성> (2024)
연금 시스템, 더 긴 기대 수명, 더 높은
저축, 사회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 결합



ILO Working Paper 5
June 2024



POPULATION AGEING: Alternative measures of dependency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work

Authors / Claire Harasty, Martin Ostermeier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즉 자신과 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의 교육과 은퇴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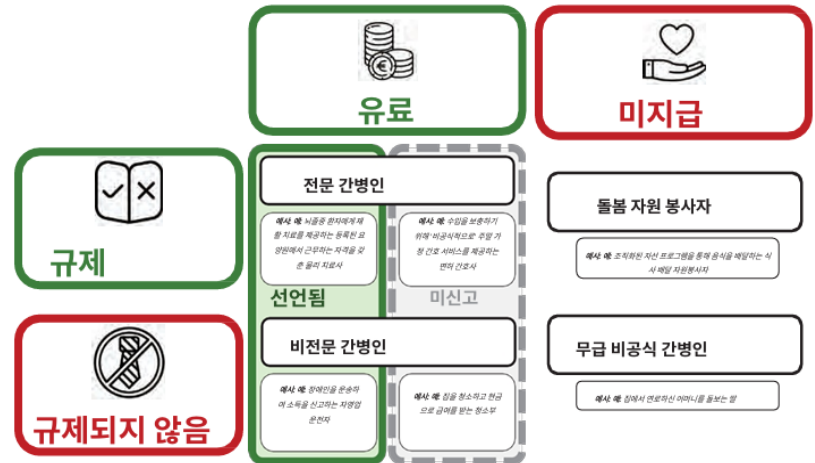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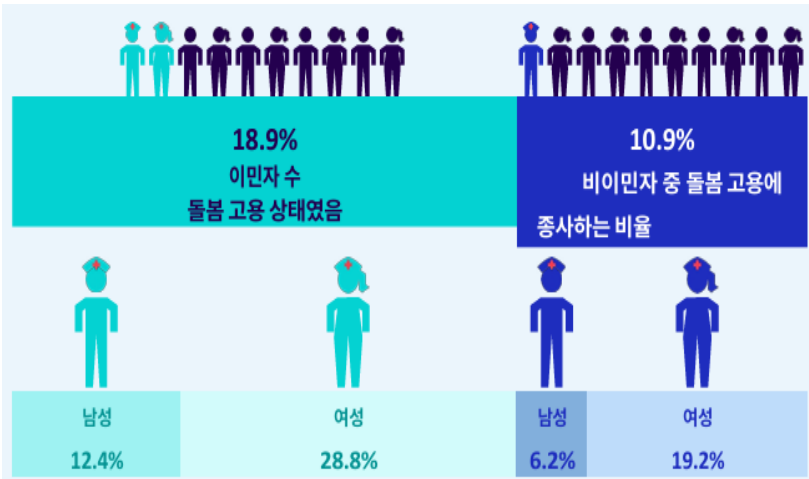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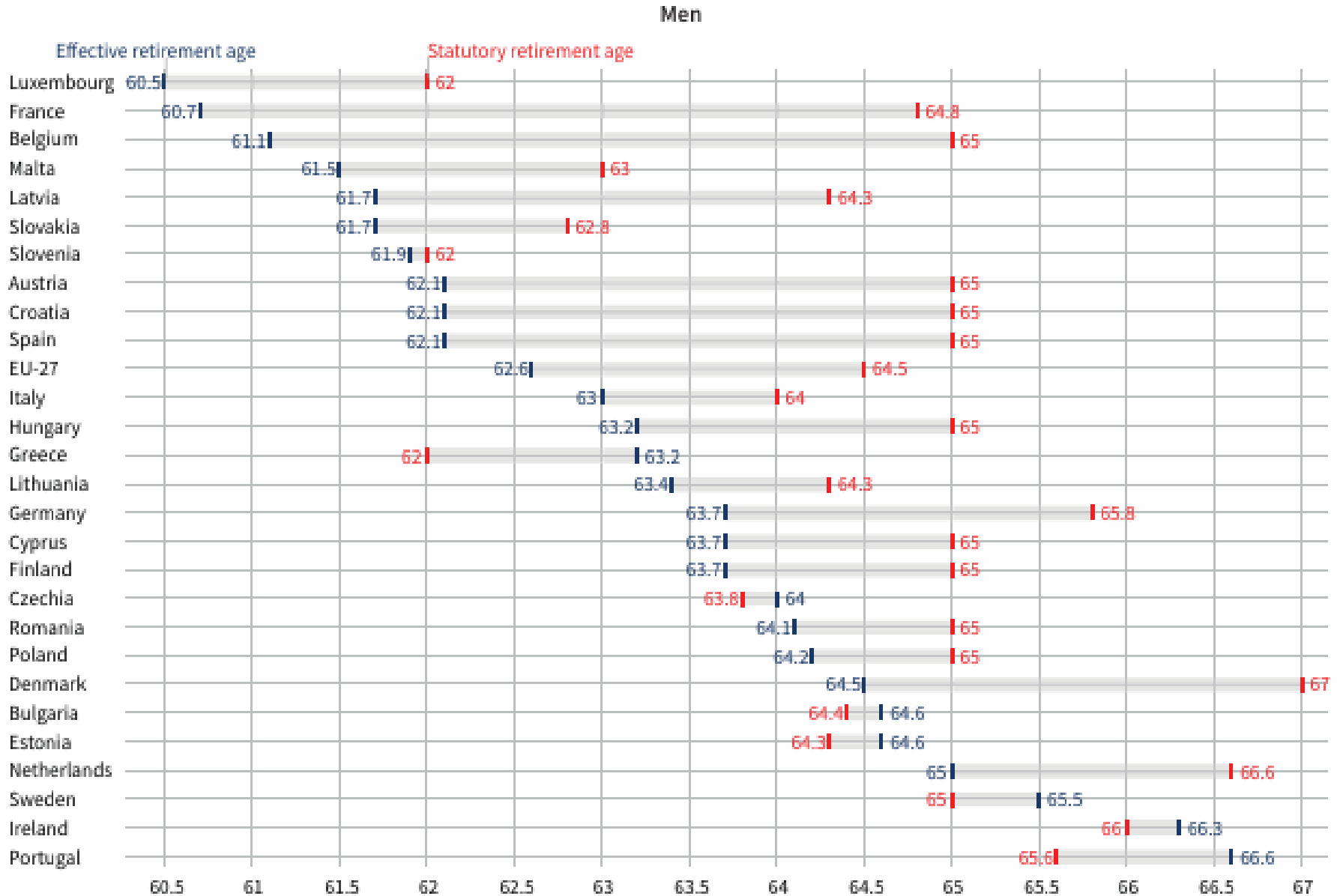


Table A1. Ranking of countries and territories by ageing statu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as % of total population) in 2020, 2030 and 2050

Rank (regional)	Rank (global)	Country	2020	Rank (regional)	Rank (global)	Country	2030	Rank (regional)	Rank (global)	Country	2050
East Asia and Pacific											
1	1	Japan	28.40	1	1	Japan	30.87	1	1	Republic of Korea	38.07
2	29	Hong Kong, China	18.20	2	8	Hong Kong, China	25.84	2	2	Japan	37.69
3	38	New Zealand	16.37	3	15	Republic of Korea	24.75	3	6	Taiwan, China	34.99
4	39	Australia	16.21	4	23	Taiwan, China	23.37	4	8	Hong Kong, China	34.68
5	41	Taiwan, China	15.85	5	29	Singapore	22.49	5	9	Singapore	33.27
6	42	Republic of Korea	15.79	6	41	New Zealand	20.54	6	18	Thailand	29.64
7	55	Singapore	13.35	7	45	Macao, China	20.25	7	21	Macao, China	28.91
8	56	Thailand	12.96	8	48	Thailand	19.61	8	37	China	26.07
9	61	Macao, China	11.97	9	50	Australia	19.32	9	54	New Zealand	23.85
10	62	China	11.97	10	62	China	16.87	10	60	Australia	22.78
11	67	Guam	10.54	11	66	Guam	14.64	11	65	French Polynesia	21.92
12	72	New Caledonia	9.70	12	71	French Polynesia	13.44	12	67	Brunei Darussalam	21.75
13	74	DPR Korea	9.35	13	73	New Caledonia	13.38	13	75	New Caledonia	20.49
14	77	French Polynesia	9.07	14	76	DPR Korea	12.70	14	76	Viet Nam	20.45
15	87	Viet Nam	7.87	15	83	Viet Nam	11.95	15	81	DPR Korea	19.70
16	95	Malaysia	7.18	16	93	Brunei Darussalam	10.20	16	82	Guam	19.19
17	98	Fed. States Micronesia	6.94	17	97	Fed. States Micronesia	10.07	17	93	Malaysia	17.00
18	104	Indonesia	6.26	18	98	Malaysia	10.03	18	102	Indonesia	15.86
19	105	Myanmar	6.24	19	101	Indonesia	9.17	19	114	Myanmar	13.18
20	107	Tonga	5.92	20	106	Myanmar	8.52	20	115	Fed. States Micronesia	1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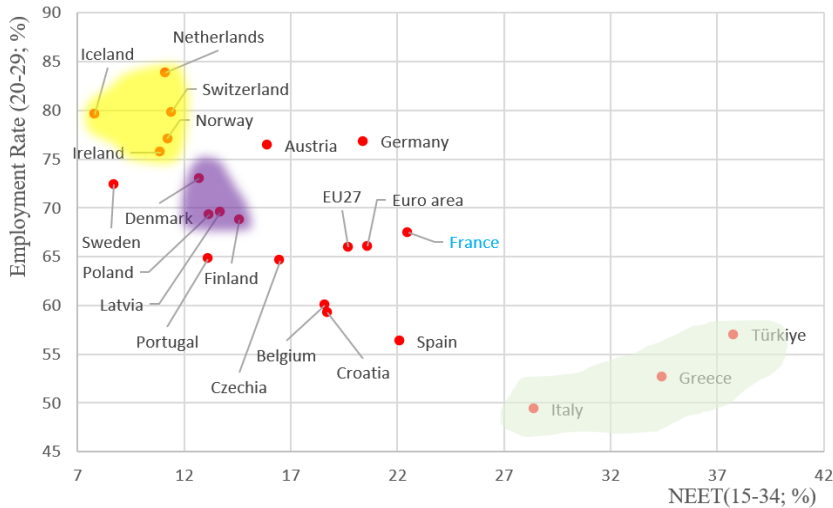
초고령화 사회, EU '실제 은퇴' vs. '법정정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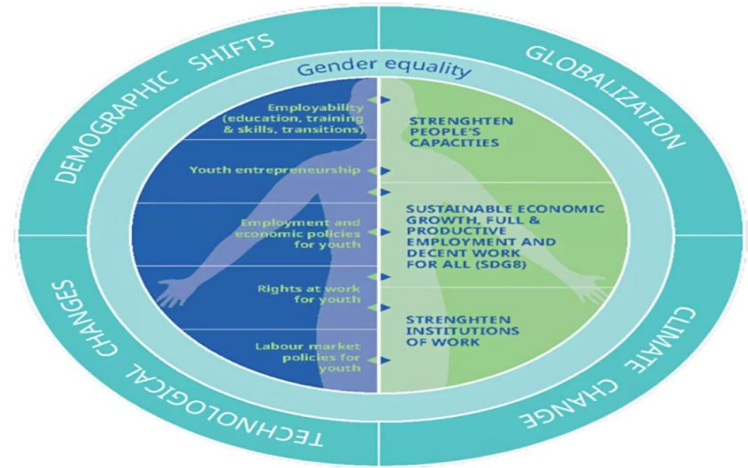
Notes: Effective retirement age is shown for 2017–2022. Normal retirement age is shown for individuals retiring in 2022, assuming labour market entry at the age of 22. Source: OECD estimates based on the results of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and the EU-LFS

글로벌 문제 - 복합위기 '인구구조 변화 - 청년니트, 노동'

EU의 청년니트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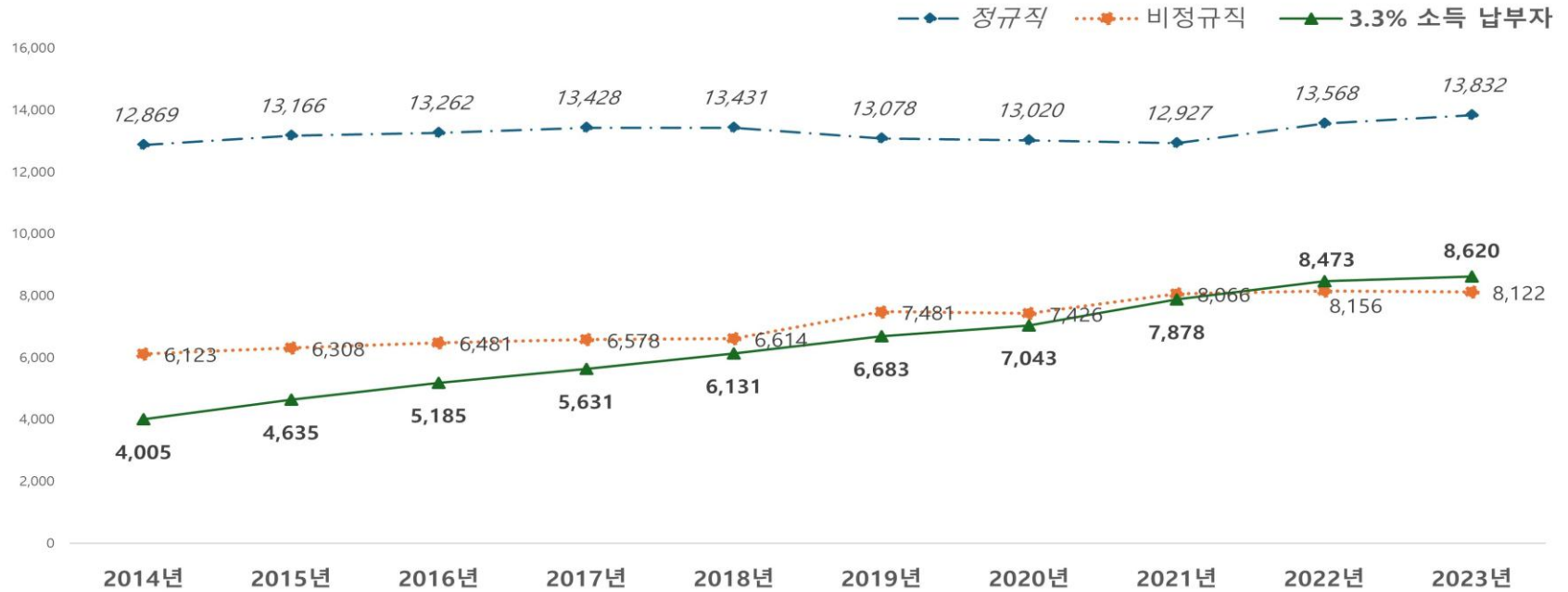


ILO의 청년고용 양질의 일자리 전략 프레임



	독일	프랑스	EU27	한국
청년인구(15-24세) * 15-34세	10.1%	11.5%	-	10.0% (19.4%)
청년실업률 * 19-34세	5.9%	17.2%	14.5%	5.8% (%)
청년니트(15-24세) * 19-34세	7.0%	10.5%	9.6%	11.0% (18.4%)
청년니트(30세 미만)	20.4%	22.5%	19.7%	14.5%
기본 원칙	EU 청년보장제	EU 청년보장제	EU 청년보장제	청년기본법

비임금노동자 지위 - 불안정 독립노동자 862만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7,043,969	7,878,928	8,473,541	8,620,883
서울	1,694,546	1,856,338	1,974,012	1,977,285
대전	178,533	202,906	215,228	218,483
충남	241,494	275,563	310,956	323,012
충북	164,437	188,891	207,274	212,916
세종	38,565	44,495	49,085	51,185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가입(23년)>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170명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1,482명
- ✓ 특고.플랫폼노동 고용보험 가입 : 13,396명

963만명 사각지대 노동

- ✓ 파견용역 간접고용 80만명
- ✓ 일용직 125만명
- ✓ 15시간 초단시간 185만명
- ✓ 5인 미만 사업장 380만명
- ✓ 고령 노동자 176만명
- ✓ 청소년 노동자 17만명

847만명 제도 밖 노동

- ✓ 특수고용 165만명
- ✓ 플랫폼노동 292만명
- ✓ 프리랜서 400만명

불안정노동, 사각지대 노동까지

1,810만명의 일하는 시민 노동



쿠팡 물류센터 채용중. 쿠팡 물류센터
팩스만 접어도 한 달 급여 최대 361만 원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우버·배달 기사도 근로복지 혜택 EU ‘피고용인’으로 분류 첫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침 합의

급여 상한·복장 규정 등 5개 항목
2개 이상 해당하면 ‘고용주’ 분류
직원에 최저임금·연금 등 권리 보장

발효 땀 2년 내 550만명 혜택

유럽연합(EU)이 음식배달, 차량호출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통제하에서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복지 혜택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근무 형태에 따라 플랫폼 기업을 ‘고용주’로, 플랫폼 노동자는 지금처럼 자영업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각각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EU 역내에서 최소 550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3차 협상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 지침’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집행위는 “이 지침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권과 사회적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침이 공식 발효되면 EU 회원국들은 이를 2년 안에 국내법에도 반영해 시행해야 한다.

이날 공개된 새 지침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5개 조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고용주’로 규정된다. 해당 지표는 △급여 상한 △성과 감득 △근무시간 관리 △업무 분장 결정 △복장·고객 응대 등 행위 규정이다. 고용주가 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 유급 휴가, 연금, 실업·질병 수당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평가를 투명화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계정 정지나 해고 같은 문제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감독하도록 했다. 노동자들의 사적 대화, 개인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디지털 기술 발달 속에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데도, 노동권·인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우버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안(AB-5)이 2020년 1월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이를 부정하는 반대 법안이 발의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도 아직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올해 7월부터는 산재보험 가입이 각각 가능해진 상태다.

그럼에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추세다.

유용성 기자

배달 플랫폼 라이더 EU “노동자로 보호”

프·독 반대에도 지침 승인 이례적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로 추정
최저임금 보장 등 적용 규정
‘AI 통한 노동자 관리’ 첫 규제도
회원국, 2년내 법률 제·개정 해야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일반 노동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규정 제정안이 유럽연합 중심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에도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11일(현지시간) 노동장관 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지침 제정에 끝까지 반대했으나, 에스 토니아와 그리스 가 막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스가르 가중다수결 요건을 충족시켰다.

가중다수결 요건은 찬성 회원국 수가 전체의 55%(15개국)를 넘고 찬성 국가의 총인구수가 전체 유럽연합 인구의 65%를 넘는 것이다. 다만, 반대 회원국이 3개국 이내면 인구 65% 조건은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유럽연합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쓴 글에서 “여러분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이들에게 더 나은 노동 조건! 장관들이 플랫폼 노동 지침 타협안을 막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플랫폼 노동 경제에 종사하는 유럽인 2850만명 이상의 권리와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장관 회의에서 통과된 지침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업체의 통제와 지시를 받을 경우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본다는 ‘법률상 추정’을 각각 노동법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

자가 자신을 일반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생긴다.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부과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장 등과 같은 노동자 보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지침은 또 자동화된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임금 등을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노동자의 생체 정보나 감정·심리 상태 등 특정 개인 정보를 알고리즘 같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노동자 관리 규제는 세계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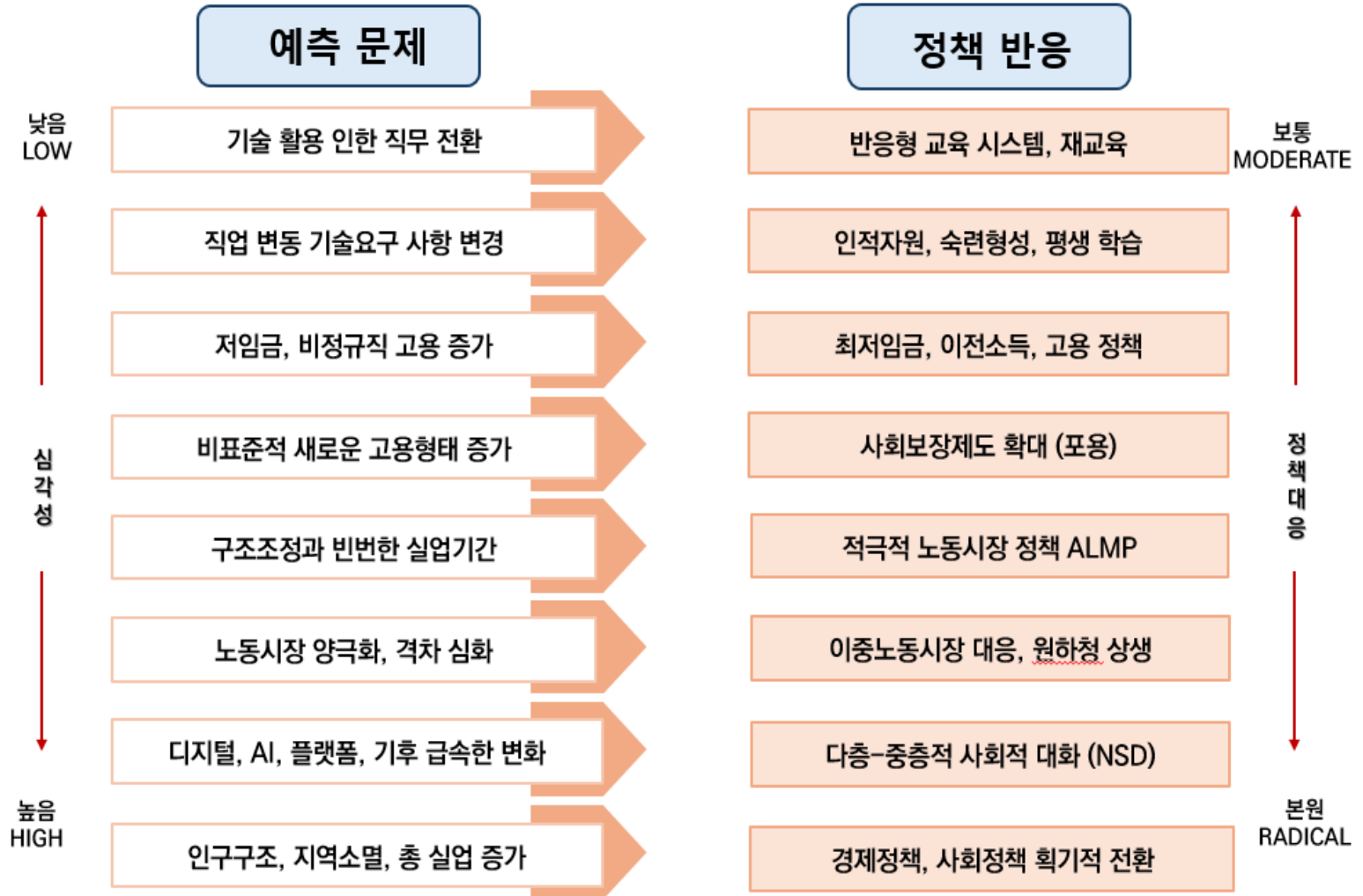
유럽연합의 지침은 목표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법률 제정은 개별 회원국에 일임하는 법령이어서, 세부 사항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지침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모임인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각 회원국은 2년 안에 법률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날 통과된 지침안은 지난해 12월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원국, 유럽의회 3자가 합의한 것에서 후퇴한 내용이다. 원안은 플랫폼이 일반 고용주처럼 작동하는지 판단할 5가지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가운데 2가지를 충족시키면 고용주로 보는 내용이였다. 프랑스, 독일 등은 3자 합의 이후 태도를 바꿔 지침 제정에 반대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초 5가지 지표를 빼는 타협이 이뤄졌다. 프랑스는 그 이후에도 반대를 고집했고, 독일도 기권 형식으로 승인을 거부했다.

한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 자체가 여야가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글로벌 문제 - 복합위기 예측 영역 & 정책 반응



복합위기 대응 - 한국 21대 대선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법안 명칭 (의안번호)	발의의원 (시기)	법률 (장, 조항)	법안 목적 (1조 정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205101)	김주영 (2024-05-31)	4개장 27개 조항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의 행복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200069)	이용우 (2024-10-31)	4개장 28개 조항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201226)	장철민 (2024-07-01)	5개장 29개 조항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관 법률 동시 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동 시행령 포함), 2) 근로기준법 개정, 3) 고용·산재보험 법률 개정
- 4)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법률 개정, 5)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근로복지기본법

복합위기 대응 - 노동시간 단축, 일과삶 균형

- ✓ 역사적 과정 - 법정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노동
- ✓ 노동시간 실험 - 1일 6일, 주28시간제, 주4일제




주 35시간 노동
프랑스 1998년



파트타임 노동 권리
네덜란드 2000년



하루 6시간 노동
스웨덴, 핀란드 실험
2002년



임금-여가시간 선택
오스트리아 2013년



IG Metall 주28시간
독일 2018년



주4일제 실험
아이슬란드, 스페인



주4일제 시행
벨기에 2023년

노동자의 '시간주권' time sovereignty

새로운 '시간의 정치'를 위한 변화의 과정

[참조1] EU 노동시간 정책 최근 변화 흐름

✓ 최근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새로운 정책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23년 시행)

연방노동법원 고용주가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판결(2022.9, BAG; 2022)



주 4일 근무요청 권리 보장 고용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 제시 ('22.10, '23.2 시행)

[주 38시간 이하] 고용조건 개정
1일 최대 9.5시간

[주 38시간/최대 40시간 초과] 단협 1일 근로시간을
주당 실근로시간 4로 나눈 값



재택 근로시간 특별규정 2022.7.1. 시행

직원 자택 수행 업무 적용, 근무시간 규정 강화.
직원 실제 주당 근무 시간 적용 규정
[예] 4주 동안 평균 3시간 이상 근무
재택/원격근무 수행 업무에도 직장 수행업무와 동일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시간빈곤 퇴치 법률 논의

- 근로자 근무시간 권한 강화 세 가지 조치
- 합의된 근무시간 유연성 및 시간 단축 방법
 -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은행
 - 근로자 시간 사용개선 계획 논의

[참조2] 해외 주4일제 다양한 실험 유형

➤ 주4일, 4.5일제 노동시간 정책 접근 (working time approach) 방식

[유형1] 중앙정부 법률, 합의 형태

- 벨기에 (주4일제 청구권, '23 법률 시행)
- 영국 ('25.3 시행 위한 근로시간위 설치 발의)

[유형2] 중앙정부 실험 형태

- 아이슬란드 ('14-'19, 취업자 1%)
- 스페인 ('21-'24, 중소기업 신청)
- 오스트리아 ('23-'24, 공공부문 2천명 실험)

[유형3] 지방정부 실험 형태

- 스페인 발렌시아('23.4-5), 프랑스 리옹('23-24)
-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23-'24), 사우스 케임브리지셔 디스트릭트('23.1-'24.3)
- 덴마크 베스팀머란트, 오르세레드 등('23)
- 미국 콜로라도 골든시, 워싱턴주 샌 후안 카운티 등('23)
- 일본 치바현, 군마현, 네야가야시 등('23-'24)

[유형4] 공공, 민간 노사 단협 추진 형태

- 실험 : 독일 공공의료 적십자사(DRK), 프랑스 교통운수(파리 교통공사 RATT), 프랑스 리들(Lidl)
- 시행 : 호주 유통 마트 버닝스 웨어하우스(Bunnings Warehouse), 울워스(Woolworths)

[유형5] 민간부문 개별 기업 실험 형태

- 시행 : 프랑스 물류 엘데엘씨(LDLC), 영국 아톰은행(Atom), 독일 철강 Thyssenkrupp, Arcelor Mittal
- 발표 : 이탈리아 람보르기니(Lamborghini), 일본 도요타자동차(TOYOTA) 등

[참조3] 벨기에 주4일제 근무 청구권 법개정 사례



주 4일 근무요청 권리 보장
고용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 제시
(’22.10.3 개정, 11.10 공표)
(’23년 시행)

[주 38시간 이하]

고용조건 개정 : 1일 최대 9.5시간까지 증가 가능

[주 38시간/최대 40시간 초과]

단협 1일 근로시간을 주당 실근로시간 4로 나눈 값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한 법률」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 travail) 제5조 1항, 2항 개정

원문

Art. 5, 1

Le règlement de travail, peut autoriser que la limite quotidienne de la durée du travail d'un travailleur à temps plein soit portée à 9 heures et demie s'il effectue ses prestations normales à temps plein durant quatre jours par semaine.

번역

제5조 제1항 전단

노동규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주4일 노동을 하는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 제한을 9시간 30분까지 늘릴 수 있다.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 travail

source service public federal emploi, travail et concertation sociale
numac 2022206360
pub. 10/11/2022
prom. 03/10/2022
moniteur https://www.ejustice.just.fgov.be/cgi/article_body{...}



3 OCTOBRE 2022. -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 travail (1)

- 자료 : 22년 법률 개정 (https://www.ejustice.just.fgov.be/cgi/loi/change_lg.pl?language=fr&la=F&cn=1971031602&table_name=loi)
- 자료 : 23년 법률 시행 (https://etaamb.openjustice.be/fr/loi-du-03-octobre-2022_n2022206360.html)

[참조4] 미국 버니샌더슨 주32시간 발의 법안



제118대 의회 , 제2차 회기, 상원 법안 제3947호

원문

A BILL
To amend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to reduce the standard workweek from 40 hours per week to 32 hours per week, and for other purposes.

"(A) for a workweek longer than thirty-eight hours during the 1-year period beginning not less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Thirty-Two Hour Workweek Act,

"(B) for a workweek longer than thirty-six hours during the second year after the first day of such period,

"(C) for a workweek longer than thirty-four hours during the third year after the first day of such period,
or

"(D) for a workweek longer than thirty-two hour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hird year after the first day of such period,"; and

번역

공정근로기준법(1938)을 개정하여 표준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것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주32시간근무법)

(A) 「주32시간근무법」 제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난 후에 개시되는 1년의 기간 중, 1주 근무시간이 **38시간**을 초과

"(B) 위 기간의 초일 후 2년 차에는 1주 근무시간이 **36시간**을 초과

"(C) 위 기간의 초일 후 3년 차에는 1주 근무시간이 **34시간**을 초과

"(D) 위 기간의 초일 후 3년 차 만료 시에는 1주 근무시간이 **32시간**을 초과"

[참조5] 주4일제 운영 모델 다양화



➤ **4-day week**

: 노동시간 증가 없이, 주 4일 근무형태 (한국 : 주32시간, 1일 8시간)

➤ **4 days a week**

: 노동시간 단축 없이 주4일 근무형태 (한국 : 주40시간, 1일 10시간)

[참조6] 다양한 주4일제 적용 방식 유형들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형태	100-100-100 모델	100-80-100 모델	80-80-80 모델
특징	동일한 업무량, 동일 주당 노동시간, 동일 임금	동일한 업무량, 주당 노동시간 감소, 동일 임금	업무량 감소, 주당 노동시간 감소, 임금 감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40시간 유지 ✓ 근무 일수 4일 ✓ 1일 10시간 근무 (업무량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32시간 단축 ✓ 근무 일수 4일 ✓ 1일 8시간 근무 (업무량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32시간 단축 ✓ 근무 일수 4일 ✓ 1일 8시간 근무 (업무량 감소/인력 충원)
사례	한국, 미국, 일본 각 지자체 한국 일부 기업 (포스코 등)	포데이 워 글로벌 모델 유럽 일부 주4일 실험 유형	한국 EU 일부 실험 모델 독일 라이트 풀타임

[참조기] 영국 주4일제 위한 '근로시간위원회' 법률 발의 사례



영국 집권 노동당 피터 다우드 의원 2025.2.11

'고용권리법안'(Employment Rights Bill), '근로시간위원회' 설치

원문

"Working Time Council

(1) The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and Trade] must, within six months of the passage of this Act, establish a Working Time Council ("the Council") to provide advice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on the matters specified in subsection (4).

(2) The members of the Council—

- (a) are to be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 (b) must include representatives of—
 - (i) trade unions;
 - (ii) businesses;
 - (iii) government departments; and
 - (iv) experts on matters relating to employment.

(3) Each member of the Council must hold and vacat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ember's appointment.

(4) The Council must provide advice and make recommendations on how a transition could be made from a five-day working week to a four-day working week with no impact on pay, including—

- (a) how such a transition would affect employers and employees, and
- (b) how businesses, public bodies and other organisations should approach such a transition.

(5) The Secretary of State may pay such remuneration or allowances to members of the Council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etermine."

번역

"근로시간위원회

(1) 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률이 통과된 후 6개월 이내에 (4)항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기업통상부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권고를 하기 위해 **근로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a) 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위원들을 임명한다.
- (b) 다음 기관의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 (i) 노동조합
 - (ii) 기업
 - (iii) 정부 부처
 - (iv) 고용 관련 사항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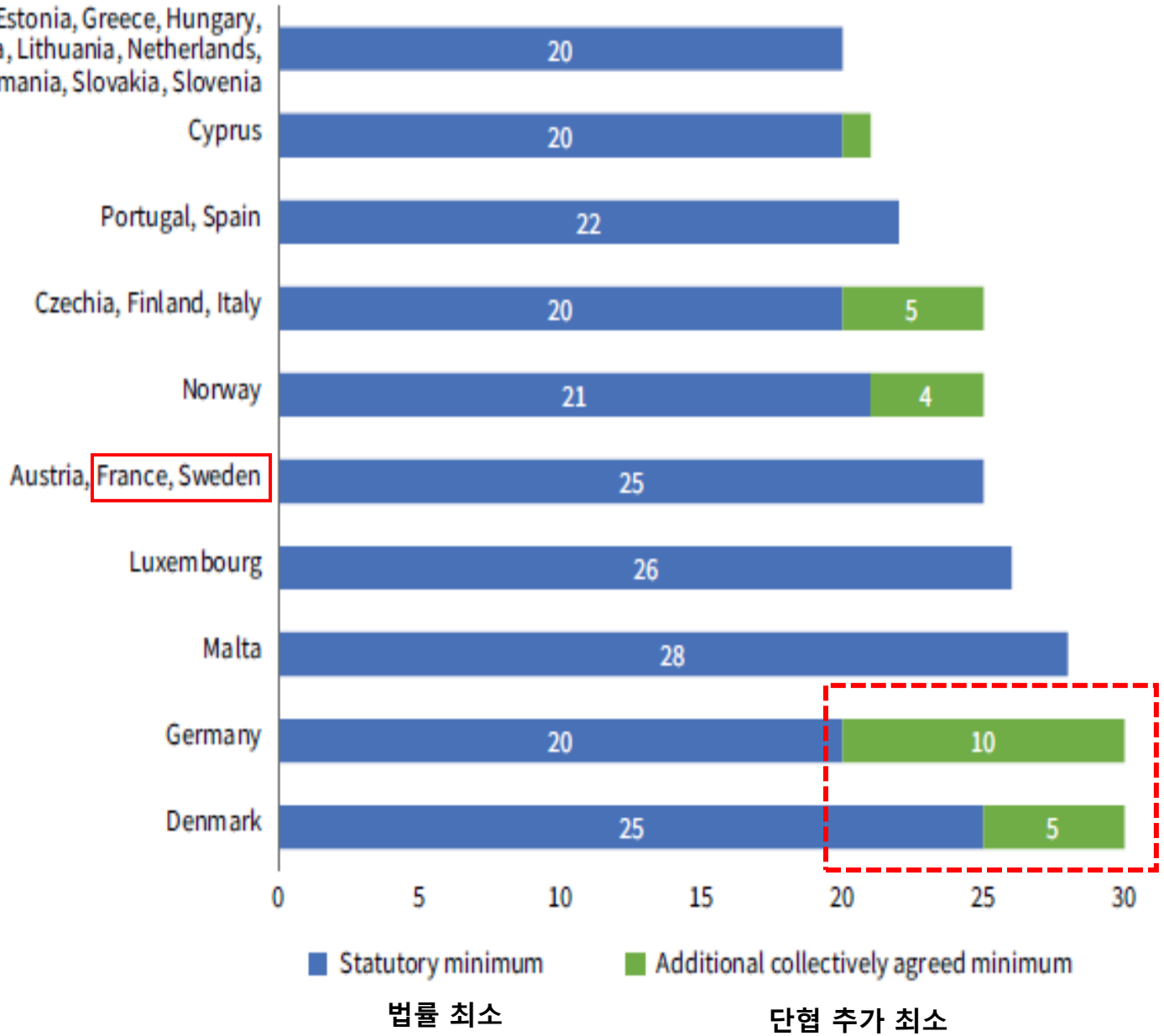
(3) 위원회의 각 위원은 임명 조건에 따라 직책을 유지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5일 근무제에서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이러한 전환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b) 이러한 전환에 대한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조직의 대응 방법

(5) 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하는 보수 또는 수당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EU 회원국
산별 단체교섭
별도
연차휴가
추가부여



Notes: The data should be interpreted in conjunction with the notes in Annex 2; figures for the EU27, EU14 and EU13 are the authors' calculations of weighted averages based on relative country sizes in terms of employment (EU-LFS, 2020).

Source: Network of Eurofound Correspondents

유럽의회 및 국가별 민주진보정당 노동공약

EU 의회 사민당 (2024.6)	영국노동당 (2025.7)	독일 사민당 (2025.3)	스페인 사회노동당 (2023.5)	덴마크 사회노동당 (2022.11)
1. 최저임금 지침 강화, 생활임금 보장	1. 신 고용 권리 법 (New Deal for Working People) 도입	1.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간당 15유로)	1. 노동법 개혁 성과 확대 및 임시직 비율 추가 감축	1. 플렉시큐리티(유연 안정성) 강화 및 현 대화
2. 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고용지위 명확화	2. 제로아워 계약 금지 및 불안정 고용 규제	2. 단기계약(미니잡) 규제 강화 및 사회보험 의무화	2. 최저임금 추가 인상 및 급여 투명성 강화	2. 외국인 노동자 덤핑 방지 대책 강화
3. 단체교섭권 강화 및 노동조합 결성 지원	3. 해고 후 재고용(fire and rehire) 관행 금지	3. 공동결정법 확대, 노동자 경영참여 강화	3. 주 37.5시간 근무제 정착 및 추가 단축 검토	3. 직업교육 접근성 향상, 평생학습 지원
4. 주4일 근무제 시범 도입 지지	4. 병가급여 확대 및 근로자 복지 강화	4. 산업전환 과정의 일자리 보장 및 재교육	4. 플랫폼 노동자 권리 확대 및 보호	4. 스트레스 및 직업병 예방 강화
5.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투자 확대	5. 노동조합 활동 제한 완화 및 단체교섭권 보장	5. 노동4.0 정책 통한 디지털화 대응	5. 직업훈련 시스템 개혁 및 확대	5. 고령 노동자 지원 정책

세상 읽기

노동 있는 대선, 지속 가능한 정책 유산을 꿈꾸며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KBS <개그콘서트>의 '아는 노래'는 적지 않은 노동 문제를 다룬다. 명예퇴직 후 1인 자영업의 삶을 다룬 코너는 많은 공감을 주었다. 일터의 감정노동과 괴롭힘 같은 내용도 프로그램에서 오브제처럼 잘 활용됐다. 눈부신 새벽녘의 환경미화원, 경력단절 여성의 잊힌 이름, 순직 소방공무원을 잊지 말자고 한다. 이 모두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여야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나. 34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부터 180만명의 초단시간 그리고 862만명의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문제는 손 놓고 있었다. 그동안 제도 밖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는 항상 자본과 관료의 벽에 막혔다.

곧 대선이다. 12·3 불법계엄과 탄핵, 파면 이후 6월3일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21대 대선은 '노동 있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되짚어보면 지난 20년 동안 시대별 노동 정책은 변화했다. 2002년 16대 대선부터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보수와 진보의 쟁점이었다. 보수정당은 노동

시장 유연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도·진보정당은 노동권 보장과 보호 및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19대 대선 시기 보수정당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중도·진보정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불안정노동자 보호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16대부터 20대 대선까지 각 정당의 공약은 어느 수준일까. 대략 보수정당은 1010여개, 중도정당은 1100여개, 진보정당은 740여개를 발표했다. 이 중 보수와 중도정당의 노동 공약은 8.2~11%였고 진보정당은 22.2%였다. 보수정당은 83개(평균 16.6개)였고, 중도정당은 121개(평균 24.2개), 진보정당은 163개(평균 32.6개)였다. 그렇다면 21대 대선에서 각 정당은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정책을 요구해야 할까. 지난 2월 조사 결과 일하는 시민들은 다음 정부 과제로 고용불안(28.9%), 저임금(16.7%), 일과 삶 불균형(13.7%), 장시간 노동(9.5%),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9.5%) 등을 꼽았다.

아마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직면하는 도전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1987년 노동체제를 바꿀 기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비전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출현한 새로

운 노동 형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토론해야 한다. 보수정당과 자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들은 혁신만 강조하면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관계는 왜 침묵하는 것일까.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도록 반사회적인 노동을 규제하고 노동이 '상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4년 6월 치러진 유럽 의회 선거 때 녹색당과 시민당의 공약도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 강화, 디지털 플랫폼 노동권리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단체교섭과 노동조합 결성,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주4일제 시범 도입 지원, 청년 고용보장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투자 확대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디지털·인공지능(AI) 대응 등은 노사정 모두가 사회적 대화로 논의해야 할 의제들이다.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 수립은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원칙은 시민권의 확장고 노동의 가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유산을 남겨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협약을 표준 규범으로 삼으면 좋겠다. 복합위기 시대 낡은 사회계약을 떨구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해 국회에서 시민의회와 같은 플랫폼 운영도 논의해보자.

22대 대선 프로세스, 어떻게 진행되나?

5/10-11

후보자 등록

6/4-13

차기 정부 시작
정부 조각 인선

5/12, 17

선거 개시
공보물 제출

6/9-13

국정 기획위 출범
(인수위)

5/18, 23,
27

TV 토론(3회)
정책 협약

6/16-7/31

차기 정부 5개년
국정과제 준비

5/29-30

사전 투표

8/15
9/15

광복절 메시지
100일 플랜

6/3

투표 개표

9/30
12/23

국정감사
차기 정부 재정

역대 대선 기간 : 2003-2022

핵심 노동정책 쟁점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시간	경영참여	플랫폼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대 이후 지속 쟁점✓ 보수정당 유연화✓ 민주진보 규제 강화✓ 생명안전 업무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진보 1만원 주장✓ 19대 이후 큰 폭 인상✓ 20대 이후 플랫폼노동 단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대 주5일 노동시간 단축 논의✓ 19대 이후 주52시간 상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진보 노동이사제✓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초기업 단체교섭 효력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대 부각 쟁점✓ 모든 정당 보호 방안✓ 일하는사람 사회안전망✓ 프리랜서 확대

2025 대선

대선후보 10대 공약



민중당 이재명

-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2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경제 실현
-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6 세종 행정수도 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8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10 미래세대 위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



국민의힘 김문수

-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7 소상공인, 민생 살아가는 서민경제
-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 10 복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개혁신당 이준석

- 1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 2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 4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 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 6 교권 보호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7 5천만원 한도 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 8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 9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 10 '과학기술 성과연금',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민주노동당 권영국

- 1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 2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 3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 4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 5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 6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 7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 8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 9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 10 지리발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자유통합당 구주와

- 1 반국가세력척결
- 2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 3 문재인 정부 악법 폐지
- 4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임대
- 5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 6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 7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 8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 9 한일 해저터널
- 10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무소속 황교안

- 1 부정선거 척결
- 2 반국가 세력 척결
- 3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 로 희망 경제
- 4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 로 창업 지원
- 5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 6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 7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 8 둘째 출산 2억 2천 원 등
- 9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 10 자유통합 국가비전 달성



무소속 송진호

- 1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 2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 3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 4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 5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 6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 7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 8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 9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 10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 줄이고 출산·육아 비용 낮춰야”...OECD의 권고 [플랫폼]

플랫폼 기사 · 2024. 7.12. 09:57

가

1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빈센트 코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분석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가] 주요 국가 '평등임금법'

미국 동등(균등) 임금법(1963), 영국 평등법(2017), 독일 동등임금법(2017), 아이슬란드 동등한 권리법(2018) 등
오스트레일리아 임금격차 보고 위반 기업 의회 공개, 특정 공공 입찰 해당 기업 배제

[EU] 23년 남녀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화 의무화 지침

- 100인 이상 기업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 임금 격차가 5% 이상일 경우 시정 요구 내용
- 2026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하고, 감시-지원 기관 설치 계획

[OECD] 38개국 회원국 중 13개 국가 남녀 격차 보고 소홀히 하는 기업 벌금 부과 등 벌칙 도입

국제노동기구(ILO)

성별 임금 차별 관련 협약(1951, 100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권고(90호)

유럽연합(EU)

성별 따른 임금 격차 철폐 및 동등한 지위보

장과 차별 해소 원칙 및 기본헌장(23조)

23년 미국작가조합 WGA & 영화TV제작자동맹 AMPTP 협상

프로젝트 임금 인상, 로열티 명시

- ① 3.5% 이상 임금 인상
- ② 재상영분배금(Residual) 인상

→ 투명성 : 해외 스트리밍 76%증가

프로젝트 고용 최소 인력 수 명시

- ① 6부작 : 3명 작가-제작자
- ② 7~12부작 : 5명 이상
- ③ 13부작 이상 : 6명 이상



[1시간 에피소드] 해외 재상영분배금
3년 동안 1만8684달러 → 3만2830달러

WGA Negotiations—Tentative Agreement September 25, 2023

We set out in this negotiation to address critical issues across our membership, brought on by changes in the business that were driving down writer pay and undermining working conditions. Prior to the strike, the companies refused to engage on most issue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deal terms for the 2023 MBA, as compared with the AMPTP offer on the table as of 5/1/2023. This contract—won with the power of member solidarity and our union siblings over a 146-day strike—incorporates meaningful gains and protections for writers in every segment of the membership.

WGA PROPOSALS (as of 5/1/2023)	AMPTP OFFERS (as of 5/1/2023)	TENTATIVE AGREEMENT (9/25/2023)
MINIMUMS		
6%-5%-5% for all minimums including residual bases.	4%-3%-2% (one-time increase to most residual bases of 2% or 2.5%).	5%-4%-3.5% for most minimums; select residual bases and minimums get lower increases and/or single increases.
FEATURES		
STREAMING FEATURES: Streaming features with a budget of \$12 million or more receive full theatrical terms, including better initial compensation and residuals.	Made-for-HBSVOD programs 96+ mins., with a budget of \$40 million or more, receive 9% increase to initial compensation; no improvement in residuals.	Made-for-HBSVOD programs 96+ mins, with a budget of \$30 million or more, receive 18% increase to initial compensation (\$100,000 for story & teleplay) and a 26% increase in the residual base. Combined with the foreign residual improvements, this produces a 3-year residual of \$216,000 for projects on the largest streaming services.
GUARANTEED 2ND STEP: Require a 2 nd step if hired for a screenplay for less than 250% of minimum.	Rejected our proposal. Countered by offering meetings to educate creative executives and producers about screenwriters' free work concerns	Require a 2 nd step if hired for a screenplay for 200% of minimum or less; also applies to purchases of screenplays.

인공지능(AI) 사용 규칙 2023.10

- ① 기존 작가가 이미 작성한 시나리오를 AI가 편집할 수 없다.
- ② 작가가 AI의 결과물을 각색하더라도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간주될 수 있다.
- ③ AI의 보조 수단으로 적은 임금이 지급될 사례를 방지한다.
- ④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작가에게 AI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The last is the first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사람이 최우선이다!



(후원 QR코드 스캔)